진실이 오른다 -밀레 MILLET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4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문화전당 예술극장 공연 대폭 축소 ▶2
도심 점령 길 고양이 퇴치 '골머리' ▶6
프로야구 내일 개막…KIA 선동열 감독 출사표 ▶14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9707호 1판 2014년 3월 28일 금요일 (음력 2월 28일)

# 정부기관 생색내기에 어민들만 피멍

뉴스초점 강진만 어업 피해보상 3년만간 돌고 돌아 제자리로

## 2011년 장흥댐 피해 민원 권익위·국무조정실 조정 해수부 입장 번복에 무산 3년 넘게 행·재정만 낭비

■강진만 어업 피해 보상 집단민원 일지

| | |
|---|---|
| 2011년 1월 13일 | 강진만 일대 29개 어촌계 1322명 강진군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제기 |
| 2011년 7월 20일 | 국민권익위, 현장조사 및 중재(실무협의회 구성 등) |
| 2012년 12월 | 제12차 실무협의회 용역비 부담 문제로 결렬 |
| 2013년 9월 | 국무조정실, 정식 안건 상정 |
| 2013년 10월 15일 | 실무협의회 재구성 및 관계기관 역할 분담 합의 |
| 2013년 12월 20일 | 실무협의회 재개 |
| 2014년 3월 20일 |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강진센터, 해양수산부 산하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강진군, 한국수자원공사 참석 실무협의회 최종 무산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도, 국무조정실의 조정·합의도 모두 소용 없었다. 장흥댐 건설 등으로 인한 강진만 어업 피해 보상 문제가 3년 넘게 돌고 돌아 결국 제자리로 왔다.

수십 차례의 조정 과정을 거쳐 지난해 말에서야 관련기관인 강진군, 한국수자원공사, 해양수산부가 패류 감소 원인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으나 환경조사를 맡은 해양수산부가 입장을 뒤집어 '불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권익위, 국무조정실, 해수부 등은 '치적 알리기'에만 급급했고 정작 피해 어민은 뒷전이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27일 강진군, 해수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강진군,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강진만 패류 피해조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했으나 성과 없이 최종 무산됐다.

해수부가 '어업 피해보상'을 전제로 한 환경조사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강진군과 수자원공사가 추진하기로 했던 패류 감소 원인조사 역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1월13일 29개 어촌계 1322명의 어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한 뒤 국민권익위, 국무조정실까지 나서 맺은 관계기관들의 합의도 결국 '휴지조각'이 됐다.

어민들은 지난 2004년 강진만에서 바지락, 꼬막, 맛 등 패류 생산량이 1만1800t에 이르렀으나 장흥댐 준공, 간척 사업 이후인 2009년 6500t으로 감소했다고 주장했었다. 어민들은 줄어든 5300t(170억원 상당)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1년 7월 20일 관계기관 현장조정을 통해 어민들이 주장하는 어업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공동실무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 합의안을 성사시킨 바 있다.

이 합의안은 관계기관의 용역비 부담 문제로 다시 표류했으며, 지난 2012년 제12차 실무협의에서 결국 결렬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국무조정실에서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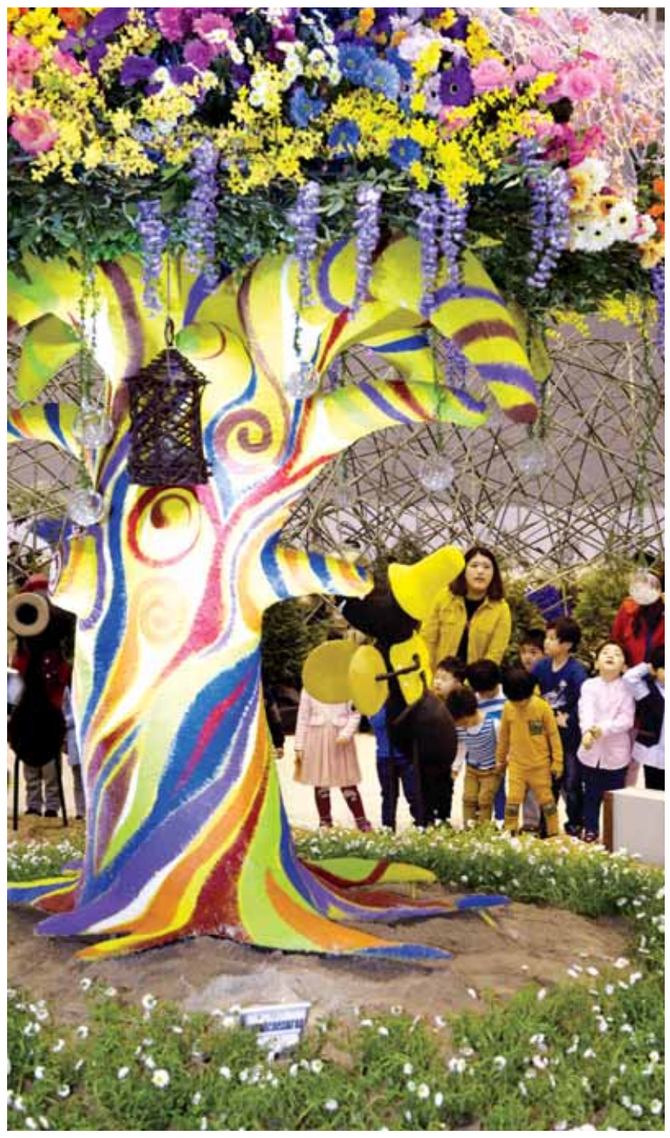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 이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고 해수부, 수자원공사, 강진군 등의 관계자들을 참석하게 한 뒤 다시 협의체 회의를 주재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환경조사는 해수부, 패류 감소 원인조사는 강진군과 수자원공사가 맡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에서는 환경조사를 하겠다던 해수부가 입장을 다시 바꾸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협의가 '헛수고'가 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피해보상을 전제로 한 어떠한 조사도 한 적이 없다"며 "용역을 하려면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데 기존 지침에서 어긋나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강진군 등 다른 기관들은 해수부의 이 같은 입장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처음부터 못한다고 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었다"며 "국무조정실에서는 합의해놓고 나중에 다른 말을 하면서 수년간 행·재정적 낭비는 물론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피해 어민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종섭(73) 강진군 수협조합장은 "정부나 지자체가 사업을 벌이면서 강진만 갯벌이 죽었고, 그로 인해 어민들의 살길이 막막해졌다"며 "피해를 조사하고 보상해준다고 하더니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농락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봄꽃의 향연 만끽하세요** 27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어린이들이 개막을 하루 앞둔 '2014 광주 봄꽃박람회' 전시장을 찾아 알록달록한 모형 꽃나무가 심어진 꽃밭을 구경하고 있다. 이번 봄꽃박람회는 28일부터 4월6일까지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亞문화전당 운용인력 2본부 21개팀 423명

## 조직 운용안 발표 콘텐츠 자체제작 비율⬆ 지역인력 5% 이상 참여

오는 2015년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은 모두 423명에 달하는 운용인력으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또 문화전당의 전시·공연공간과 창작 콘텐츠(전시·공연, 운영 프로그램)의 경우 대관·외부제작 방식에서 벗어나 자체제작 비율을 높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맞춰 운용된다. 콘텐츠 창작·제작에는 지역 문화·예술인력 5% 이상이 참여하게 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추진단)과 아시아문화개발원은 27일 광주시 남구 광주 콘텐츠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문화전당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한 열린 세미나'에서 문화전당 조직 운영계획과 개관 콘텐츠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2면〉

문화전당 운영 조직은 2본부 4감독 1개 연구소, 1개 센터, 21개 팀 423명(정규직·전문 계약직)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됐다. '전당운영 본부' '민주평화교류원' 등 2개 본부를 두고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아시아예술극장, 어린이 문화원에 각각 예술감독을 두는 체제로 꾸려진다. 추진단이 조직 구성안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런 조직구성은 문화전당의 운영 주체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것이지만, 사실상 문화전당의 운영의 뼈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화전당의 운영 주체를 정부 기구, 또는 법인, 정부기구+법인 형태로 꾸릴 것이냐를 결정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추진단은 "문화전당 개관이 임박한 상황에서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부득이 조직 구성안을 마련했다"며 "법률안 처리에 따라 직원들의 신분은 바뀔 수 있으나 조직 구성의 틀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단은 문화전당 개관 콘텐츠 창작과 제작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맞췄다. 광주·전남지역 작가·문화기획자 등의 참여 비율을 5% 이상 유지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문화전당의 공연·전시공간인 아시아예술극장, 문화창조원 복합전시관, 어린이 체험전시관의 경우 공연·전시장 임대와 창작물 외부 제작을 자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날 두번째 공개된 개관 콘텐츠는 문화전당이 지향하는 '아시아 동시대 문화 창조 플랫폼'을 구체화한 것으로, 문화전당 5개원(민주평화교류원·아시아문화정보원·문화창조원·아시아예술극장·어린이문화원)의 전시·공연, 운영 프로그램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주평화교류원은 아시아 문화교류 협력 네트워크 거점, 아시아문화정보원은 아시아 문화자원 전문 아카이브 및 교육연구센터로 조성된다. 문화창조원은 새로운 세상을 위한 아시아문화창조자들의 집, 아시아 예술극장은 아시아 동시대 공연 예술의 플랫폼을 구성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추진단은 오는 4월3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문화전당 콘텐츠와 운영계획을 공개,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올 상반기 중에 확정할 계획이다.

김성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은 "문화전당 건립도 중요하지만, 전당의 콘텐츠는 전당의 향후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 현안"이라며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적의 콘텐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독일은 한반도 평화 통일 모델"…朴대통령·메르켈 정상회담

독일을 국빈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회담 및 만찬을 하고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를 비롯한 실질협력과 통일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 등을 협의했다. 두 여성 정상은 이날 베를린 시내 연방 총리실 청사에서 한 회담에서 투자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독일 측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통일준비 과정에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도록 견인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회담후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한국과 독일은 냉전 당시 분단이라는 아픈 경험을 공유하는 특별한 유대감을 갖고 있으며 독일은 이미 통일을 넘어 통합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모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The C-Class 36개월 무이자 할부
062)226-0001
Mercedes-Benz

학교설립 60주년 (1954~2014)
60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미래를 열어가는 현대아산
합리적인 내집마련의 기회, 어디 없을까?
현대그룹의 600만원대 내집마련 프로젝트!
[ 운암산 현대아산 빌앤더스 ]
가칭 동림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3월 28일 주택홍보관 OPEN
※본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VILL N DUS 현대그룹
합리적 가격으로 만나는 내집마련의 기회
[ 운암산 현대아산 빌앤더스 ]
[ 쾌속교통 ] 빛고을로, 호남고속 · 제2순환도로와 직결되는 동림IC와 인접
[ 청정자연 ] 영산강과 운암산으로 둘러싸인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 명문교육 ] 국제고, 예술고, 전남대, 보건대 등 우수한 교육환경 구축
[ 미래가치 ] 600만원대 합리적 가격으로 누리는 현대그룹의 브랜드가치
[ 프리미엄 경품 이벤트 ]
1등 : 모닝(경차) 1대
2등 : TV 2대
3등 : 지펠냉장고 3대
4등 : 드럼세탁기 14kg 4대
5등 : 스팀청소기 20대
6등 : 자전거 30대
일정 3월 28일(금)부터 4월 11일(금)까지
추첨일 4월 12일(토) 오후:4시
※자세한 사항은 주택홍보관에 문의 바랍니다. ※상기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 추진위원회 조합원 가입 상담 문의 ]
062)373-0111
시행사 현대아산 자금관리 아시아신탁
시행사 가칭 동림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영산강 광주천 롤리데이인 광주호텔 5·18 자유공원 김대중 컨벤션센터 운암산 현대아산 빌앤더스 주택홍보관 서창IC 김대중 컨벤션센터역
※대지위치 : 광주 광역시 북구 동림동 750번지 일원 ※사업규모 : 지하 1층, 지상 25층, 12개동 ※본 아파트의 하자 등에 따른 재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5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본 홍보물의 조감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건물의 명칭, 동표시, 색채 및 외관, 조경계획은 인허가, 예정상의 및 법규의 변경 등으로 인해서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물상의 개발 및 교통계획에 대한 사항은 추후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와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